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2006. 3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2006. 3

박종철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국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허문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북·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3
1.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	3
2. 현황	7
3. 종합평가	13
III. 북·중관계의 영향	16
1. 북한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16
2.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 및 경협의 상대적 비중 약화	18
3. 6자회담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지연	19
4. 북한인권·체제문제에 대한 미·중간 입장차이 확대	21
5. 북·중·러의 전략적 유대 강화 가능성	22
IV. 우리의 대응방향	24
1. 기본방향	24
2. 세부 추진방향	25
<표 II-1> 북한 대외무역의 국가별 비중	10
<표 II-2> 북한의 원유 및 곡물 도입 실적	14

I. 문제제기

-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은 냉전시대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서 양측의 실리와 안보적 이익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음.
- 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북·미간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관계가 긴밀화됨으로써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가 나타나고 있음.
 - 북·중간 무역 및 투자 증대
 - 정치·외교관계의 긴밀화
 - 정상간 상호방문 증대
- 북·중관계의 긴밀화는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수렴된 결과로 평가됨.
 - 중국: 북한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위상 강화
 - 북한: 미국의 대북압력 완화와 경제지원 확보 및 체제보장
- 북·중관계의 긴밀화는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하고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를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
 - 반면, 핵문제 해결과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 약화,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남북경협에 상대적 중요성 약화 등 부정적 측면도 존재
- 따라서 북·중관계 강화의 현황과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여 한반도평화·번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보고서는 북·중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 양국 관계의 현황 및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 북·중관계 강화가 북핵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경협, 동북아정세 등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제시

II. 북·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는 3단계에 걸쳐 발전했음.
 - 냉담기(1992~1998): 한·중 수교 이후 북·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지원 저조
 - 회복기(1999~2002): 김영남 방중 이후 정부간 교류 및 경제교류 증대
 - 발전기(2003~현재): 2차 북핵 위기 이후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및 경제교류·협력 확대

- 현재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유지하는 한편, 실리에 따라 부문별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다층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북·중은 북핵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체제 유지와 미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

1.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

가. 중국

-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 중국은 유일 초강국인 미국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한편, 15개 주변국

과 선린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다자적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주변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동남아: ASEAN+3, EAS
- 중앙아시아: 상하이협력기구(SCO)
- 동북아: 6자회담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선린외교 기조와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으로서 입지 강화’라는 대국외교 기조가 동시에 존재함.
 - 한반도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비핵화, 평화와 안정유지,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 중국은 남북한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한국과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는 이보다 한 단계 위상이 높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국 및 대미·일 관계에 유리하다는 판단
- 탈냉전 후 중국은 한·중수교 영향 및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2차 북핵 위기 후 미·일의 대북압박으로 인한 북한 붕괴 가능성과 한반도정세 불안을 우려하여 적극적 북한관리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하였음.
- 중국의 적극적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위상 강화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제고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
 - 후진타오체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관리에 치중

-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韜光養晦(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 배양)로부터 有所作爲(능력에 상응하게 해야 할 바를 함)로의 변화를 반영
-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3자회담 및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북·미간 입장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9·19 공동성명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입장 타결이 용이하지 않고, 미국의 자유의 확산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은 대북관계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국익 확보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관리하고자 함.
- 중국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긴장고조 방지 및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개혁·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정학적으로 미·일 해양세력을 차단하는 완충지대에 위치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기대
-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 하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역 패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이를 대미관계에서 입지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강화 견제도 기대

나. 북한

- 2000년대 초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과 북한식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 2002.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 2002. 9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 발표
 - 2002. 9 북·일정상회담
 - 2002. 10 금강산 관광개발 및 개성지구 개발 법령 발표

- 그러나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더욱이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됨으로써 북한식 개혁·개방이 난관에 봉착하였음.
 -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지칭하고 북·미간 접촉 중단

- 북한은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여 핵동결 해제와 핵보유 선언 등벼랑끝 외교를 전개하였으나 결국 중국의 중재 하에 6자회담에 참가하여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음.
 - 북한은 핵포기 대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요구

-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입장과 6자회담 거부 시 수반될 미국의 대북압박조치를 고려하여 6자회담에 계속 참여하는 한편, 대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응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함.
- 북한의 대미 외교전략은 균형(balancing)전략, 편승(band wagoning)전략, 돌파(breakthrough)전략, 버티기(muddling-through)전략으로 유형화 될 수 있는 바, 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미국이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현상변경전략에 입각하여 대북강경책을 추진한다고 판단, 대미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균형전략에 입각하여 대중관계를 강화함.
 - 편승전략: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대미정책
 - 돌파전략: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 버티기 전략: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6자회담 개최 이전

2. 현황

가. 정치적 측면

- 탈냉전기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가 아닌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실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을 추구해왔음.
 -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 그러나 2차 북핵문제를 계기로 북, 중 양국은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핵문제 이외에도 개혁·개방, 탈북자, 동북공정 등 양국간 현안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는 추세

- 양국 정상의 빈번한 상호방문 등 인적 유대관계의 복원으로 양국간 상호 협력채널이 고위층에서부터 복원·가동되고 있음.
 - 중국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가 2005년 10월 방북한 데 이어, 2006년 1월 김정일이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방중
- 김정일 방중 시(2004. 4; 2006. 1) 중국의 최고 권력층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9인 전원을 접견함으로써 북·중은 당 대 당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복원·유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함.
 -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당의 연락채널이 활용되는 유일한 국가
- 후진타오 방북 시(2005. 10) 후진타오와 김정일은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전략적 방침’임을 합의했음.
 - 긴밀한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한 상호 채널 구축, 교류 영역 및 협력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촉진,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에 합의

나. 경제적 측면

- 탈냉전 이후 중국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발전을 이룩한 자국의 발전노선을 북한에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권유한 바 있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국관계는 소원한 상태였음.
 -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유지
- 비록 북한이 중국의 경험을 모델로 신의주 특구를 추진(2002. 9)했으

나, 당시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동북진흥계획’을 기획추진하고 있던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했음.

- 중국 측이 행정장관 내정자인 양빈을 전격 체포

○ 그러나 2차 북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대미·일 경제관계가 악화되는 반면, 북·중간 경제교류·협력이 크게 증대하는 추세임.

○ 중국은 ‘호혜협력·공동발전’의 원칙과 ‘정부인도·기업참여·시장운용’의 방침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11차 5개년계획(2006~2010) 및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동북 3성의 경제개발과 연계하여 북한의 지하자원과 유통, 건설 분야에서 경협 중점 추진

○ 북·중 교역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3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4년 13억 8,5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5년 15억 8,000만 달러로 증가

<표 II-1> 북한 대외무역의 국가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	488(23.5)	737(27.6)	738(25.4)	1,023(32.8)	1,385(39.0)	1,580
한국	425(20.5)	403(15.1)	641(22.1)	724(23.2)	697(19.6)	1,055
일본	464(22.3)	475(17.8)	370(12.7)	265(8.5)	253(7.1)	
러시아	46(2.2)	68(2.6)	81(2.8)	118(3.8)	213(6.0)	
태국	208(10.0)	130(4.9)	217(7.5)	254(8.2)	323(9.3)	
인도	172(8.3)	158(5.9)	191(6.6)	158(5.1)	135(3.8)	
기타	275(13.2)	702(25.0)	664(23.0)	572(18.0)	541(15.0)	
총계	2,078(100.0)	2,674(100.0)	2,901(100.0)	3,115(100.0)	3,554(100.0)	

주: () 내는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북·중 무역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북·일관계 악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축소 등임.
 - 북한은 대일 주력 수출품목인 어패류, 섬유(피복류 위탁가공), 채소 등의 수출선을 중국으로 전환
 -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 통상제재 강화와 국제기구의 대북 원조 감소로 인해 북한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을 중국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함.

- 2002년 북한의 「7·1 조치」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 및 실제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
 - 「7·1 조치」 이전 중국의 대북 투자는 소규모의 10여건에 불과
 -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130만 달러에서 급증하여 2004년 1억 7,350만 달러 상회

- 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는 2004년부터 중국 내 여러 성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북 투자설명회, 중국 기업의 무역 및 투자 사절단 방북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저장성 윈저우(溫州)시 주최 대북 투자설명회(2004. 7), 랴오닝성 선양(沈陽)시 기업가협회 주최 대북 투자설명회(2004. 11. 18, 선양시 칠보산호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의 요청으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주최 ‘조선투자설명회’(2005. 2. 25, 북경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강당) 등 개최
 - 복건성과 사천성 경제사절단은 2004년 각각 두 차례 방북하여 무역 및 투자(합작) 상담을 진행하였고, 중칭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2005년 북한 현지답사 후 대북 투자업체 모집

- 중국의 대북 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주로 동북 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
 - 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관심 표명

-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을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시장에 대한 선점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간과할 수 없음.

-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통해 북한 시장 선점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 예상
 - 경제난 지속으로 인한 북한 붕괴 방지 및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강화 기대
- 북·중 경제관계는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넘어서 양국간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북·중간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2005. 3, 박봉주 내각총리 방문 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2005. 10,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시) 체결,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2005)
 - 중국의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 기간에 양국 간 「경제협력 협정」 및 「세관협력 협정」 체결 예상

다. 군사안보적 측면

- 중국은 동북지역의 안정 및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안보관계를 유지해왔음.
- 북한과의 안보관계 강화가 대미관계 개선에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이 안보적 완충지대로서 필요하다는 전통적 안보관이 우세
- 북·중우호조약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조항은 현재 공세적 측면보다는 방어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대남 도발시 중국이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반면,
 - 미국의 대북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 존재
 - 중국이 이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중국의 대북 군수 원조 및 수출은 1995년 이후 대폭 감소했음.
 - 군사지원에 관한 실질적 협력보다는 친선·우호관계 차원의 군 인사 교류를 유지하는 상징적 관계

- 북·중 군사관계는 인적 유대를 통한 비공식적 관계로부터 국익을 고려한 공식적 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
 - 탈북자 국경진입 차단, 국경지역의 안정유지, 북한 유사시 대비 등을 위해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담당을 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교체(2003)
 - 「국경협력협정」(2004. 6) 체결

3. 종합평가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물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 북한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수단면에서 북·중동맹관계,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양국간 인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어느 나라보다 큰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수단: 지원·무역·투자
 - 정치·외교적 수단: 북핵문제의 안보리 논의, 인적 교류 및 외교관계, 탈북자문제 처리
 - 군사적 수단: 군사교류 및 협력, 국경봉쇄, 자동군사개입 조항 적용,

PSI에 대한 입장 등

- 중국의 대북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은 원유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에도 중국이 최대 제공국임.
- 전체 곡물 도입 실적에 포함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제외할 경우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곡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표 II-2> 북한의 원유 및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톤,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	전체	110.6	60.9	31.7	38.9	57.9	59.7	57.4	61.3	
	중국 (45.8)	50.6 (45.8)	50.3 (82.6)	31.7 (100.0)	38.9 (100.0)	57.9 (100.0)	47.2 (79.1)	57.4 (100.0)	53.2 (86.8)	52.3
곡물	전체	163.0	111.2	107.0	122.5	140.0	100.5	80.9	69.7	
	중국 (53.2)	86.7 (53.2)	28.8 (25.9)	23.8 (22.2)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20.6 (30.0)	48.1

주: () 내는 북한의 전체 도입 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 북한의 대미·일 경제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대중경제의존도 증대로 인해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정책의지 면에서 볼 때, 중국은 대북영향력을 북한체제 붕괴 방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중국 내 일부에서 ‘김정일체제 비판론’, ‘북·중우호조약 폐기론’, ‘안보리 회부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수단의 사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대북 군사조치,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경제제재, 인권 문제 제기 등 반대
 - 중국은 대북압박조치 반대를 통해 미국의 강경정책 견제

-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6자회담의 중재,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한반도평화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북핵 폐기, 개혁·개방정책의 구체화 등에 대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

Ⅲ. 북·중관계의 영향

1. 북한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안정에 기여함.
 -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의 생존력 과시
 - 대내적으로 결속력 강화
- 탈냉전 이후 중국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정책노선을 수용할 것을 권유해 왔음.
 -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체제수호적인 개혁·개방에 주력
- 북한은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신의주 행정특구를 추진(2002. 9)했으나 중국의 협력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음.
 - 중국은 신의주특구에서 카지노, 향락산업 등이 우선 추진될 것을 우려, 특구 행정장관 내정자인 양빈을 전격 체포
-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및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은 경제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2000년 김정일 방중 이후 북한은 일정 기간의 내부준비를 거친 후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
- 향후 북한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은 개혁보다는 개방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임.

- 김일성 주석과 비교할 때, 김정일위원장은 대외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대내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지가 주로 남부지역의 경제특구에 집중된 것은 북한의 개방 확대를 시사
- 북한의 개방정책은 시장사회주의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개방특구에서 시장경제의 운용원리를 수용하면서 단계별로 개방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개방 확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토대로 추진될 것임.

-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서 북한의 개방을 촉구
-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거나 북한 서북 지역을 추가로 개방특구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북한이 「7·1 조치」의 후속조치로서 획기적인 대내 경제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7·1 조치」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가 폭등,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
- 최근 북한이 배급제를 다시 강화한 것은 경제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북한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
- 농업부문에서 농가책임제와 같은 개혁조치도 아직 시기상조

2.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 및 경협의 상대적 비중 약화

-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는 남북관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미·일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
 - 북한도 대미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중관계 강화와 남북관계진전의 병행 추구

- 북·중은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 계기마다 상호 협의해 왔는 바, 최근 북·중 지도부간 빈번한 접촉은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직전 김일성 방중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 방중 등

- 특히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 경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대북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대북투자 경쟁 유도 희망

- 그러나 북한의 대중경제의존도 심화는 대북협상에서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남북경협의 구조적 제약 및 북·중 경제관계 진전의 속도가 남북경협의 속도보다 빠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남

북경협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북·중무역 증가율이 남북교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의 상대적 비중 감소가 예상됨.
 - 북·중교역의 대부분은 상업적 거래인 반면, 남북교역의 40% 정도는 비상업적 거래이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 증가율은 북·중교역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에너지, 철강, 화학, 기계, 식료 등)의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등의 이점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이 용이하지 않음.

- 또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북 투자는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북 투자부문에서도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기업은 북한이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
 - 중국은 동북 3성 개발과 관련된 자원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물류 등 기간산업 부문에 투자를 계획·실행

3. 6자회담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지연

-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주선하고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6자회담의 공전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특히 9·19 공동성명은 중국의 중재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음.

- 북·중관계 긴밀화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증가시킬 것임.
 - 미국은 북·중관계 긴밀화를 용인하는 대신, 중국이 대북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대북영향력을 통해 향후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북한 위폐문제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BDA(Bank Delta Asia)가 중국 관할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됨.
 - 미국은 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중국에게도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
- 중국은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금융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의 주선으로 크리스토퍼 힐 미차관보, 우다웨이 외교부부장, 김계관 부상간 회담(2006. 1. 18)
 - 마카오 은행의 대북금융거래 중단 선언(2. 16)을 통해 북한의 위폐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이근 국장의 방미시(3. 7)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와 6자회담 재개문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보다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

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북핵문제의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 대립으로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 전후처리, 이란핵 개발 문제, 부시행정부의 인기저하, 미국내 정치일정(2006. 11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와 같은 강경책을 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

- 또한 북한은 북·중관계를 활용하여 6자회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되, 핵폐기를 지연시키고 생존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중관계 긴밀화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6자회담의 틀은 유지되겠지만, 단기간에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4. 북한인권·체제문제에 대한 미·중간 입장차이 확대

- 중국의 대북영향력 증대에 비례하여 미국은 자유의 확산정책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비민주적 성격을 계속 문제시 할 것인 바, 이를 둘러싸고 미·중간 입장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은 인권, 위조지폐, 마약 등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할 것임.

- 반면, 중국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유의 확산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비타협성과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과 정치·외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할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자유 및 인권확산정책이 자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견지
-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인 대북 PSI 적용과 관련하여 미·중간 견해차이도 증대할 것임.
 - 미국은 대북 PSI 적용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대중견제
 - 중국은 대북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대중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귀결될 것을 우려

5. 북·중·리의 전략적 유대 강화 가능성

-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對 중·리의 느슨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의 지역 패권세력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 중·리는 동북아 연안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일동맹 강화를 견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러·북간 안보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북·중, 북·러, 중·러간 각각 양자차원의 군사·안보협력 증대
 - 단, 북한을 포함한 북·중·러 3국간 합동군사훈련이나 3국간 군사동맹 가능성은 희박

- 북·중·러간 안보협력 증대는 미·일 對 중·러 대립구도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질서 안정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IV. 우리의 대응방향

1. 기본방향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게 핵개발 포기 및 개혁·개방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바, 북·중관계 긴밀화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함.
- 북·중관계 강화의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중관계 강화와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정착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함.
 - 6자회담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증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반면, 북·중관계의 증가로 인한 남북경협의 비중 약화,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 가능성, 북·중·러 안보협력 증대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질서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
- 아울러 북·중관계의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미·일 對 중·러의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층적인 외교·안보 활동을 전개함.
 -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 중·러·일과 전략적 안보대화 병행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기구 형성을 위해 노력

2. 세부 추진방향

<북한 개혁·개방 지원>

-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3자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함.
 - 남북한과 중국의 3자 협력을 통한 신의주 특구 개발 모색
 - 우리측 기업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예를 들면 단둥)에 진출하여 신의주 특구를 중심으로 한 북·중경협과 연계효과 창출
 - 남포·원산·함흥·백두산 등의 3자 공동 개발
 - 경의선과 중국 철도망 연계
 -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남북한, 중국의 공동농업 개발

- 북한이 개혁·개방의 구체적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민족 발전전략’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전략, 북한판 마샬플랜)을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추진할 것을 북한에게 제안함.
 - 우리측의 일방적 연구가 아니라 북한의 전문가와 공동 연구·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모색>

- 북·중 경제관계 긴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조기에 구축함.

- 중국의 대북투자가 주로 북한의 북부지역에 집중될 것을 감안, 개성공

단 개발을 적극 추진함.

- 1단계 본 공단 개발사업의 조기 완료 및 2, 3단계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중국의 대북투자가 민간기업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우리측은 대북 에너지 지원·협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북 투자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함.

- ‘북한지역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마련, 북한 경제 회생에 효과가 큰 분야부터 개발사업 전개

<한·중간 다층적 협력구도 구축>

○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과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한·중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함.

- 한·중간 전략대화 실시

-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 트랙을 운용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 마련>

○ 6자회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9.19 공동성명의 이행구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 한·중협력 하에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함.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이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 으
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회
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 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정세분석 2006-04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3(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 2285-0936~7
인쇄일	2006년 3월 일
발행일	2006년 3월 일
